

기획예산처-지방정부, 지역소멸, K자형-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지방주도성장' 견인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 지방의 목소리 담아 예산편성과 국가발전전략 수립 -

- ◇ 기획처 출범 이후 최초로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과 협의회 개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과 협력 전략 논의
 - 지방주도성장 추진과정에서 ①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②중장기적 미래 성장 설계, ③소통과 신뢰 기반의 정책 파트너십 강조
 - 장관급 소통·협력 채널인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상설화도 추진
- ◇ 임기근 직무대행, “지방의 아이디어를 국가 전략으로 연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7년 예산안 및 중장기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예산편성지침에 5극3특 중심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우대·행정통합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맞춤형 정책 확대 위한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

기획예산처는 2. 26.(목) 11:00 서울에서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되었다.

<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26. 2. 26.(목) 11:00 / 여의도 글래드호텔(2층 프로젝트 A룸)
- (참석자) 중앙정부기획예산처 차관(주재), 미래전략기획실장, 재정참여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재정투자심의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지방정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조정실장

기획처는 이날 지역소멸과 K자형 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주도성장을 '지방을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지방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①지역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②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③재정전략 수과정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소통과 신뢰 기반의 정책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획처가 추진 중인 지방주도성장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덧붙였다. 우선 균형성장을 위해 포괄보조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26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을 앞두고 5극·3특 중심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우대·행정통합 등 재정 인센티브 반영,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중점 방향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도개선 과제 제안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 인센티브 신설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11.)을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지방의 민자 활성화' 주요 내용 >

-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신설) 민자사업자 선정시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을 신설(100점 중 1점)하고,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5%p)
- (지역업체 인센티브 신설) 공공계약제도상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에 도입하고, 민자 SPC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허용
- (지방정부 지원) 「민자 카라반*」 가동('26.上), 공식적 채널에 지방정부 의견 반영**('26.下), 지역 맞춤형 민자 컨설팅 확대('25년 60건 → '26년 200건 이상)

* (주체) 중앙부처(기획처 등)·KDI·신보 등 / (운영) 지방정부 현장에서 월 1회 운영 (역할) 사업발굴·사업화, 절차 컨설팅·지원, 제도개선 과제 추진 등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1명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추천

아울러,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효과적 지원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 강점을 살린 초광역 핵심 프로젝트 도출에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별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미정산·미반납 국고보조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균형발전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원활하고 균형적인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획처는 향후 재정·전략 분야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기획처와 관계부처, 지방정부로 구성된 장관급 전략 플랫폼인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상설화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설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참여정책관 재정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손창범 (044-214-1910)
		담당자	사무관	유연정 (yjyou1@korea.kr)
담당 부서	통합성장정책관 포용성장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담당자	사무관	류동재 (dongjae1635@korea.kr)
담당 부서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지역예산과	책임자	과 장	김혜영 (044-214-2950)
		담당자	사무관	고광민 (sniper1019@korea.kr)
담당 부서	재정투자심의관 민간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대원 (044-214-333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jwpark1202@korea.krr)
담당 부서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책임자	단 장	임영진 (044-214-3370)
		담당자	사무관	박미경 (gabkyung@korea.kr)